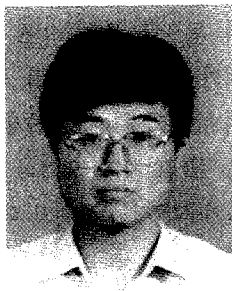


21세기 한국농업의 발전전략과 미래모습

조 재 환
(曹在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I. 한국농업의 국내외 여건변화
- II. 21세기를 향한 한국농업의 발전전략
- III. 21세기 한국농업의 미래모습

I. 한국농업의 국내외 여건변화

70년 중반까지 농업은 공업부문에 비해 투자 우선순위에 있어 열위에 있었지만, 식량생산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다. 식량생산이 부족하고 외환이 부족하였던 이 시기에는 주곡을 자급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확충이 농정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산업화의 진전으로 농·공간 생산성과 소득격차가 계속 확대되어 농가소득 문제가 정치·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 지지를 위한 가격정책이 농정전면에 부상하였으나, 양특적자로 인한 양정전환론이 서서히 대두되고, 경제정책 기조 역시 가격정책의 후퇴와 물가안정이라는 쪽으로 선회하는 「개방농정」을 등장시켰다. 과거와는 달리 외환사정이 호전되어 필요한 식량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이 농산물의 국제가격이 장기적 하락추세가 나타나자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은 그 중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개방농정」은 수입농산물이 국내 농산물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농업은 식량공급능력의 쇠퇴와 농가경제의 부실화를 계속 겪게 되었다.

80년대 중반을 전후해서 90년 초반까지는 국내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이 본격화된 시기로 한국농업의 국내외 여건변화가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농정 전환기」인 이 시기에는 89년 GATT의 BOP조항 졸업으로 국내 농산물

시장개방 계획이 발표되었고, 93년 UR 농산물협정으로 국경보호 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보조방식에서도 제한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국내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어촌종합대책」이 마련되었으며 농업구조개선사업이 농정시책 전면에 부상하였다.

21세기를 향한 한국농업은 이제부터 「개혁 농정기」를 맞게 되었다. 국제무역기구(WTO)의 출범은 세계경제가 하나의 교역규범과 하나의 국제무역기구에 의해 규율되는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 분야에서도 자유무역체제가 확립될 것이다. 세계 경제는 점차 국경이 없어지면서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할 것이며 한국농업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개혁 농정기인 21세기는 우리의 능력과 대처노력에 따라 한국농업의 생존여부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결정될 것이다.

II. 21세기를 향한 한국농업의 발전전략

1.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개혁

「개방농정」이 대두된 이래 한국농업은 경제논리로 존립기반을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경제논리 이전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한국농업은 경쟁력이 없기때문에 과감히 축소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속되어 왔다. 이 두 가지 주장은 모두 한국농업은 하나의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없다는 데에 공통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의 농

업여건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21세기의 한국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같은 패배주의적 인식을 타파하고 한국농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인식의 합의」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가. 농업발전에 대한 자신감 회복

지난 1세기 동안 세계 각국은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호관세, 수량규제를, 그리고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조금지원 등으로 보호주의를 강화하였다. 또한 자국 농민의 소득지지를 위해 국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수매가격 지지, 최저가격 보장, 생산비 보조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UR 농산물협정과 국제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은 이제 보호주의 아래 길들여진 세계 각국 농업에게 벅찬 도전이 될 것이다.

현재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저개발국가들도 조만간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발전단계에 도달하면 이 같은 교역질서의 대변혁은 극복할 수 없는 제약요소로 작용할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농산물 수입 개도국은 물론 농산물 수입 선진국들에게도 이 같은 대변혁은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이같은 교역질서의 대변혁은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간에도 큰 파장과 마찰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세계적인 기상 이변과 식량위기 등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국제무역기구체제의 출범은 어느 향로를 거쳐 항해를 해 나갈 지에 대한 문제

가 계속 남게 된다.

한편 UR 농산물협정과 국제무역기구(WTO)의 출범은 한국 농업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속에서도 한편으로는 한국농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농업의 미래는 국내외 농업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주어진 환경변화속에서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간의 모든 교역문제가 국제무역기구(WTO)에 의하여 관리조정되므로 강대국의 불공정한 수입규제나 개방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세계 각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이 축소되어 우리 농산물의 수출이 그 만큼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국내 농산물 시장개방이 반드시 우리 농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세계 각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이 축소되어 농산물 교역이 확대될 경우 세계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 또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국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향상되는 결과

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농산물이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는 데에는 가격 경쟁만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과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소비자들의 그러한 차별적 기호를 개발함으로써 가격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 농산물 교역환경 변화에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경우 UR 농산물협정과 국제무역기구(WTO)의 출범은 한국농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농업역할에 대한 인식전환

농업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야말로 농업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한국농업의 역할은 식품 유통업, 가공업, 농기업을 포괄하는 산업연관적 측면과, 그리고 농촌환경과 생태계보전이라는 환경조화적 측면보다는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범주에 국한되어 평가되어 왔다. 1970년대 중반이후 20여년 동안 세계 곡물 재고량의 증가와 가격하락은 「개방농정」 등장과 함께 「식량안보」의 중요성마저 반감시켰고,

〈표 1〉 세계 주요곡물의 재고율 변화

구분	1975	1980	1985	1990	1995
쌀	16.7	17.7	17.1	17.0	11.6
밀	25.0	25.6	34.8	25.9	19.2
사료작물	14.9	17.1	27.3	16.6	11.5

주) 1. 기말재고가 총소비에 차지하는 비율.

2. 사료곡물은 옥수수, 보리, 수수, 귀리, 호밀 등을 포함.

자료 : USDA FAS, Grain - World markets and Trade.

그 만큼 농업의 중요성은 퇴색되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세계적인 기상 이변으로 곡물 생산이 감소한 반면, 인구증가와 소득증대에 힘입어 소비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85년에 비해 1995년 세계 곡물재고율(총소비량 대비 재고 비축분 비중)이 밀과 사료곡물의 경우 15% 정도, 그리고 쌀의 경우 5%정도 감소하였다. 이 같은 95년의 상황은 세계적인 식량위기로 곡물가격이 폭등하였던 1972~73년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쌀과 사료곡물의 경우 재고율이 FAO의 권장수준인 17~18%보다 약 5~6%정도 크게 밑도는 수준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식량사정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망하면 비관적인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징후가 발견된다. 세계 식량사정에 대한 비관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로는 첫째, 농업자원의 집약적 이용으로 자연생태 환경의 파괴문제를 심각히 경험한 바 있는 미국과 EC 등 선진국들이 「지속적 환경보전적 농업」을 농정 전면에 부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식량 수출국이었던 이들 국가들이 농업자원 보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저투입 농업, 유기농법, 휴경제 등 조방적 농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세계 식량사정은 낙관적일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세계적으로 경지면적의 외형적 확대가 이미 한계에 달하였고, 아프리카, 중국, 미국 등의 사막화 현상과 함께 지구환경의 악화로 기상재해의 빈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으로 축산물 소비가 증가될 것이므로 사료곡물에 대한 수요증가가 식용곡물의 생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비료, 농약 잔류에 대한 식품유해 논쟁이 거세짐에 따라 저투입 농산물 소비증가 추세에 맞춰 농업생산체계 역시 저투입 농업이 도입될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의 세계식량 사정하에서 한국농업의 역할은 「식량안보」 보장, 즉 “세계 식량사정이 어떠한 변화와 충격에 빠지더라도 국민이 필요한 최소한도의 칼로리를 공급할 수 있는 농업생산수준 유지”라는 양적인 안전성과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안전한 식품소비 보장”이라는 질적 안전성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한편 21세기에는 한국농업이 일차적으로 담당해야 할 「식량안보」 보장이라는 역할 이외에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역문화 유지라는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다. 농촌지역에서 영농활동이 지속적으로 가능하여야만 자연생태계 역시 보전된다. 한국과 같은 몬순기후 지역의 경우 그리고 수전농업이 중심이 되는 경우 논이 항상 담수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강우량이 일시적으로 저장되거나 하천유입속도를 완만하게 하여 범람의 피해를 줄이고, 표토의 유실을 방지하는 등 수자원 및 토양보존이 가능하다. 농촌지역의 산과 들에 나무, 작물, 목초 등이 자라고 또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정비작업이 영농활동에 의해 수반되므로 자연공간 또한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인간에게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농업의 자연생태계 유지기능은

최근 선진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관광, 휴양, 그리고 민박활동 등이 왕성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잘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농촌지역 마다 크고 작은 문화재가 있고, 또 설화, 음악, 무용, 놀이, 생활양식 등 전통문화가 면면히 전해내려 오고 있다. 따라서 농가에서 민박, 농촌지역의 관광이나 휴양은 단순한 「즐거운 여가」 이상의 의미 - 교육적인 의미 - 가 대단히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농업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 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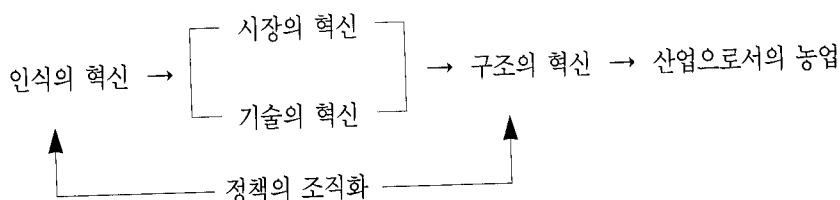
다.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개혁」

농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의 원리가 관철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보완되고 개선되는 「시장혁신」이 필수적이다. 「시장혁신」이 이뤄진다는 것은 이제까지 농업정책에 혼합되어온 산업정책으로서의 정책개념과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정책개념이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에서 산업정책과 사회복지

이 혼동되면 농업의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며, 결국에는 한국농업의 성장잠재력 감퇴뿐만 아니라 농가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정치 사회적 문제로 말미암아 국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장혁신」과 아울러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기술혁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꾸준한 기술혁신에 의하여 경쟁의 씨앗이 농업에 지속적으로 투입되지 않으면 경쟁은 불모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생명공학, 반도체 분야 등 첨단기술의 응용으로 토지나 기후 등 자연자원에 대한 절대 의존으로부터 기술과 자본 등의 인위적 요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농업기술 혁신 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시장혁신」, 「기술혁신」과 함께 효율성이 높고 경쟁력이 있는 농가에게 농업자본과 농지가 집적되어 이들이 농업생산의 중심이 되는 「구조혁신」이 촉발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같은 혁신의 연쇄반응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정책, 소비정책, 구조정책, 교역정책, 그리고 환경정책이 하



〈그림 1〉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개혁의 개념

나의 체계속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집행되기 위해서 농업정책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2. 한국농업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21세기의 한국 농업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은 크게 4부분으로 나뉘질 수 있다. 생산부문에서는 농업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농업구조개선과 기술개발 전략이, 그리고 소비부문에서는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상품개발 전략과 유통체계 능률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부문에서는 농촌환경 및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전략이 추진되어야 하며, 통상 부문에서는 세계 농업정보 수집·분석으로 대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 농업발전을 위한 이같은 전략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들의 우선 순위와 사

업들간 연관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농정주체의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경쟁할 수 있는 터전을 넓혀 주는 일 - 교역정책, 구조정책, 기술정책 등에 주력하고, 그리고 시장기능에 의해 소외되는 시장실패 부문을 보완하는 일 - 자원정책, 환경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에 국한하여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제도와 정책을 기초로 해서 지방자치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한편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간에 우선순위가 재조정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중앙정부의 정책 의도를 벗어 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농정기획 조정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표 2〉 선택적 농가지원 프로그램

구 분	프 로 그 램	내 용
상업적 전업농	○ 농지구입자금 지원 ○ 농지임차 알선 및 임차료 용자 ○ 경영수탁 알선	○ 전업농 중심의 지역생산 조직의 결성지원 ○ 종합금융지원 ○ 기술교육과 경영지도
전직희망 탈농	○ 전직교육 및 보조금 지원 ○ 취업알선	○ 농지신탁 혹은 임대알선과 장려금 지급 ○ 장기임대시 임대료 일시 지급
사회보장 탈농	○ 농지신탁 혹은 임대알선과 장려금 지원 ○ 장기임대차시 임차료 일시 지급	○ 자녀학자보조금 지급(자녀대책) ○ 의료부조금 지급(질병대책) ○ 연금 혹은 최저생계비 보조(생활대책)

가. 농업구조 개선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는 취업구조 조정과 농지유통화가 촉진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 따라서 농업구조 조정은 농가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전업농, 전직 탈농, 사회보장 탈농 등 대상 농가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지원 제도를 선택적으로 마련해서 궁극적으로 취업구조 조정과 농지 유통화 촉진이 유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업적 전업농에게는 농지구입 지원자금 또는 농지임차 알선과 임차료 용자 등을 지원하고, 사회보장 탈농(노령화된 농가)에게는 임대알선과 경영이양 연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지유통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직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전직훈련과 취업알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재촌탈농의 촉진과 농지의 유통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한편 농업구조개선 투자는 농업진흥지역의 수도작 전업농가 또는 농업법인 중심으로 집중되어 그 효과가 타 부문에 파급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쌀은 한국인의 식습관상 식량으로서의 중요성이 다른 어떤 농산물과도 비교될 수 없고 식량안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UR 농산물협상에서 쌀은 예외적으로 2004년까지 개도국 우대조치를 받은 품목이며, 또한 쌀이 우량농지 대부분에서 생산되므로 이 부문이 능률화되어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식량안보는 물론 농촌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유지기능 또한 추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05년 이후 쌀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다시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따라서 쌀에 관한 한 앞으로 통상마찰의 중심 핵으로 부상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검토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앞으로도 수도작 농업은 구조개선 정책의 중심적 관심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나. 농업기술 개발

기술개발은 농산물의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양적인 측면과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는 질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전략이 세워져야 한다. 앞으로 국민의 식생활은 고급화되고 다양화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도 위생적인 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가공식품형태로 소비되는 부문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농업기술도 이러한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다수확·고품질 품종개발과 비용절감을 위한 재배기술의 개발, 비료와 농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투입재 신제품 개발, 그리고 농산물 가공기술의 개발 등에 투자가 집중되어야 한다.

기술개발 체제는 기존의 공공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연구기관까지 참여를 확대하여 기술개발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는 일부 채소 육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농업기술개발이 공공연구기관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다양한 첨단기술의 응용이 필요해지고 농가가 요구하는 기술이 다양해질수록 민간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연구기관만으로는 그와 같은 다양한

기술분야, 다양한 기술개발수요를 전부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의 참여가 가능해지려면 기술개발의 성과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육종법을 개정하여 민간이 농축산물 품종을 개발하여 상업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신품종 등 농업기술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부여하여 개발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분야별로 기술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면, 쌀은 수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동시에 수입미와 맛의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소비자의 기호에 가장 잘 맞는 품종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리는 앞으로 답리작을 중심으로 생산되어 대가축용 사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초다수확이면서 숙기가 빠른 극조생종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답리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내습성이 강한 품종육성이 필요하다.

채소와 과일은 특히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도록 품종과 재배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에 대한 기호조사, 시장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술개발 방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농약잔류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생물농약을 개발하고 바이러스에 강한 내병성 품종을 육성하도록 한다. 또한 시설재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자동제어장치와 열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일도 중요하다.

한우에서는 번식능력이 뛰어난 품종육성과 쌍자우 생산기술개발 등으로 값싼 소우를 생산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수입육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미있는 품질의 고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기술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젓소는 개체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돼지와 닭은 비육 혹은 산란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지방질이 적은 고품질 고기를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농산물 수요 촉진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그리고 맛, 멋, 예술을 중시하는 쪽으로 식품소비 형태가 바뀌게 될 것이다. 또한 주부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구매 행태도 소형화, 편의화, 개성화, 다품목화 경향을 띄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변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식품소비형태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 생산 공급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한편으로 소비자의 식품 소비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품개발에 주력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를 위한 농산물 생산·공급이야말로 한국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이 같은 기본 조건이 충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통과 물류기능의 능률화를 꾀하면서 동시에 국제기준에 맞게 농산물의 등급화, 표준화, 품질인증, 안전성 보증제도들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농산물의 수요촉진을 위한 제도가 정비되면 농산물 수출 역시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과

일, 시설원예, 양계, 양돈, 버섯, 인삼 등의 경우 국제적 비교우위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품목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구미지역에 수출이 가능할 수 있으며, 특히 유통과 물류기능의 능률화와, 농산물의 등급화, 표준화, 품질인증, 안전성 보증제도 등이 정착될 경우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은 더욱 더 용이할 수 있게 된다.

라. 농업의 환경보전

산업화·도시화의 진전으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과 대기오염이 증가함에 따라 국토자원의 환경보전이 매우 긴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비농업부문은 자연을 훼손하고 수질과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된 환경오염원으로 인식된 반면, 농업부문은 토양보존 기능, 수자원 보존 기능, 홍수조절 기능, 대기정화 기능, 그리고 자연생태계 보존 기능을 담당하여 온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자연생태계와 조화를 이루어 왔던 전통적인 농법에서 집약적인 농법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촌지역에서도 환경보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농업은 살충제, 제초제에 의해 노동생산성을, 그리고 화학비료에 의해 토지생산성을 높여 왔지만 반면에 이에 대한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고, 해충은 물론 익충까지 멸종시켜 자연생태계가 훼손되었다.

따라서 한국농업은 환경보전을 위해 이 같은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본래 갖고 있는 순기능을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

다. 지금의 한국농업은 국내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농업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할 처지이므로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은 투자 우선순위에서 하위에 머물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농업구조 개선사업이 완결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탈락되는 한계농지를 대상으로造林을 하거나 또는 유기농법을 도입하여 가격경쟁력 보다는 품질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방법, 그리고 자연생태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지역개발(예 관광, 휴양, 민박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보전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개발 부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료와 농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자연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투입재의 신제품 개발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한편 농업구조 조정이 완료된 시점부터는 농업이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서, 그리고 농촌 지역이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보전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인간에게 가치가 있는 환경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 농업 통상정책

WTO 출범과 더불어 향후 UR 무역자유화 논의를 가속화시킬 APEC의 결속, OECD 가입, 뉴라운드, 그린라운드 등에 얼마나 적절히 대처하고 적극 참여하느냐가 개방화, 국제화 속에서 한국농업의 생존여부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농산물 교역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안전한 농산물을 값싸게 수입하거

나 또는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요 농산물 수출·입국의 수급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둘째, 각국의 농업정책의 변화를 상세히 조사 분석할 뿐만 아니라 셋째, 각국의 이해관계와 국제농산물 교역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 농업정보 수집·분석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UR 이후 새로운 다자간 협상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농산물 교역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세계 농산물 교역협상은 한국농업이 적어도 EU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때까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데 그 핵심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농산물 협상은 국내 농업정책과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유지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Ⅲ. 21세기 한국농업의 미래 모습

세계 교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한 농림수산업 경쟁력 제고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농림수산업의 부가가치액(1995년 불변기준)은 2000년에 23.7조원, 그리고 2020년에 가서는 25조원으로 이 기간동안 연평균 0.3%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림수산업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21세기 고도 산업화 사회에서는 생산·가공·유통 및 관련산업이 연계된 복합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업 및 관련산업의 생산규모(1995년 불변기준)가 2000년에 65.3조원에서 연평균 3.2%씩 성장하여 2020년에 가서는 124.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다. 그 결과 농림수산업 및 관련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 13.4%에서 2020년에 10.0%수준이 될 것이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2000년에 205만명에서 연평균 5.2%씩 감소하여 2020년에는 7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조정을 통한 고령농가의 경영이양 촉진으로 소수 정예화된 기업적·전문경영체가 농림수산업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농어가 호수는 2020년에 50만호에 이를 것이며, 그 중 전업 농어가는 12만호를 차지할 것이다.

농경지 면적은 기초식량의 자급기반 확보를 위한 농지자원 보전정책에 힘입어 2020년에 가서는 164만ha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 호당 경지규모는 2000년에 1.4ha에서 계속 확대되어 2020년에 3.3ha수준이 유지되고, 농지 임대차 등 유동화 촉진으로 수도작 전업농가의 영농규모는 10ha가 될 것이다. 농업 구조조정의 장기적인 효과로 인해 농어가소득은 2000년에 2,350만원에서 연간 5.1%씩 상승하여 2020년에 6,460만원이 될 것이다.

한편 21세기 농어촌은 환경보전정책에 의해 쾌적한 자연생태 공간을 유지하고,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2·3차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업인과 타 산업 종사자가 혼주하는 산업공간을 보장할 것이다. 지역간 균형개발로 상하수도 보급, 도로포장 등 사회 기반시설과 그리고 교육, 문화, 의료시설 등 복지·후생시설 투자가 확충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은 도시 못지않은 주거환경 속에서 쾌적한 삶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에서 비농가인구는 2000년에

〈표 3〉 농림수산업 농어촌의 주요지표 전망

구 분	1995	2000	2010	2020	연평균 변화율	
					00/10	00/20
농림수산·관련산업 생산(10억원)	55,648	65,307	92,973	124,846	3.5	3.2
(GDP대비 비중)	15.9	13.4	11.0	10.0		
- 농림수산업 생산액 (10억원)	23,069	23,682	26,202	24,970	1.0	0.3
(GDP대비 비중)	6.6	4.9	3.1	2.0		
농림어업 취업자수 (천명)	2,541	2,050	1,220	730	-5.2	-5.2
- 총취업자 비중 (%)	12.5	9.2	4.8	2.7		
농어촌 인구 (천명)	9,572	8,580	8,110	8,070	-0.6	-0.3
- 농어가 인구 (천명)	5,210	4,050	2,590	1,660		
- 비농어가 인구 (천명)	4,362	4,530	5,520	6,410		
농어가 호수 (천호)	1,610	1,350	780	500	-5.5	-5.0
- 전업농어가 (천호)	-	90	120	120		
농경지 면적 (천ha)	1,985	1,880	1,740	1,640	-0.8	-0.7
- 논 면적 (천ha)	1,206	1,150	970	940		
- 호당면적 (ha)	1.2	1.4	2.2	3.3		
농어가 소득 (만원)	1,740	2,351	4,140	6,460	5.7	5.1
- 그 중 농업소득 (만원)	1,047	1,411	2,463	3,790		
- 그 중 농외소득 (만원)	693	940	1,677	2,670		
(농외소득률) (%)	(39.8)	(40.0)	(40.5)	(41.3)		
농림수산물 수출액 (억불)	30.5	60.0	110.0	150.0	6.1	4.6
농어촌 생활환경						
- 상수도 보급률 (%)	39	57	90	100		
- 도로 포장률 (%)	25	39	85	100		
- 현대식 주택개량률 (%)	31	46	80	100		
- 병상시설 (인구/병상)	600	400	300	300		

주 : 농외소득에는 이전소득 미포함

420만에서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 640만명으로 증가하고, 농가인구는 재춘탈농 및 비농업부문 취업증가로 인해 2000년에 405만명에서 2020년에 166만명으로 계속 감소될 것이다. 2020년에 농어촌 인구는 807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충남**

참 고 문 헌

- 이정환, 21세기를 향한 한국농업의 역할과 발전지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산업연구자료, 1987.
- _____, 한국농업의 선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세기 농정자료시리즈, 1988.
- _____, 두 부문 모형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 조재환·성명환·사공용, 농업부문 총량지표 중장기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 이정환·조덕래·조재환, 경제사회발전과 농림수산업의 역할 변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 한국개발원, 신경제 장기구상(초안), 1995.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경제 장기구상 : 농림수산 장기발전 구상(안), 1995.
- 한두봉·김병률, 21세기를 향한 한국농업의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